



라파흐
지상 공격이
시작되다

2, 3면

국민연금
개약 시도

5면

전공의
파업

6면

극우의 국제적 전진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11면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16, 15면



미국 대학생들의
점거 운동
3~4, 8~10면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라파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다

이스라엘은 라파흐 대학살

중단하라

관련 기사 2, 3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라파흐를 공격하다

라파흐에 갇힌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에게는 탈출구가 없다

김인식

이스라엘군은 5월 6일(이하 현지 시각) 전투기로 라파흐 소재 시설 5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또, 탱크를 라파흐에 진입시켜 소규모 작전을 벌였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흐 진입 작전이 시작된 듯하다.

이스라엘 정부의 5월 5일 알자지라 지국 폐쇄 결정도 라파흐 학살의 정지 작업인 듯하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대부분 차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자지구의 알자지라 특파원들은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구실을 해 왔다.

폭격 직전에 이스라엘군은 라파흐 동부 지역에 전단지를 뿌려 민간인 대피를 명령했다. 라파흐 동부는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벌이기 시작한 지역이다.

죽기 싫으면 도망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라파흐에 갇혀 있고 탈출구도 없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라파흐 동부에서 “약 10만 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라파흐 인근 칸 유니스와 알마와시를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다. 칸 유니스에는 50만 명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라파흐 공격 수 시간 만에 개최한 7일 낮 긴급 기자회견에 여러 국적 사람들이 참가해 규탄했다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라파흐에 피란해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140만 명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결코 피란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피란 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거듭 공격했다.

5월 6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에게 사실상 라파흐 공격을 통보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 정치인들은 라파흐 학살을 부르짖는다. 5월 5일 국

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네 타냐후, 지금 라파흐로 가라!”고 말했다.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도 예루살렘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금 당장 라파흐로”를 외쳤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린 직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한 가자 휴전안을 수용한다는 확실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실은 협상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라파흐 작전을 계속 수행하기

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라파흐를 공습하고 있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1명이 숨졌다. 그중에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하마스는 5월 5일 카렘 아부 살렘(케렘 살렘) 검문소(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통로)에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죽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지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휴전을 거부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거부해 라파흐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요아브 갈란트는 5일 가자지구 중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가 실상 우리와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를 감지했다. … 조만간 라파흐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 행동이 시작될다는 뜻이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도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탓”이라며 이스라엘을 편들었다.

그러나 하마스는 5월 5일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적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를 끌어내려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완전한

휴전, 점령군의 가자지구 철수, 피란민들의 기존 거주지로 귀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오히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진행되던 가자 휴전 협상 와중에 라파흐 침공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네타냐후였다.

“[휴전 협상] 타결되면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흐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군사 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휴전 협상에서 논의된 “핵심 요소” 하나가 베냐민 네타냐후의 라파흐 침공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라파흐 지상전 자체가 아니라 그 작전만을 문제 삼는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미국이 마음먹으면 학살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진짜 입장을 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주되게 네타냐후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네타냐후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분명하게 말하면 … 장담컨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알자지라, 5월 4일 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라파흐 지상전에 착수하지 않도록 미국이 보증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확실한 민간인 피해 대책이 없다면 미국이 라파흐 침공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이다. 라파흐 군사 작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사람들보다 그 작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흐 침공을 강행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를 단념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기본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네타냐후를 “자제”시키는 모양새로 대외 이미지를 바꾸려 한다.

라파흐 피란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바이든이 그런 일로 고뇌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미국 정부가 노심조사하는 것은 라

▶ 3면으로 이어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미국 대학생들이 경찰에 맞서 싸우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미국 학생 운동이 경찰 탄압에 굴하지 않고 반격하고 있다. 경찰을 캠퍼스 밖으로 쫓아낸 경우도 몇몇 있다.

5월 3일 현재 120곳 넘는 캠퍼스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으며, 매일 미국 곳곳의 새로운 캠퍼스에서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백악관에서 도보로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계양한 팔레스타인 깃발을 내리려는 경찰을 저지했다. 학생들은 경찰을 몰아내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대(對)이스라엘 투자 내역] 공개하라! [투자] 철회하라! 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2일 목요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는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졌다. 같은 날 뉴욕 소재 예술대학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학생들이 학생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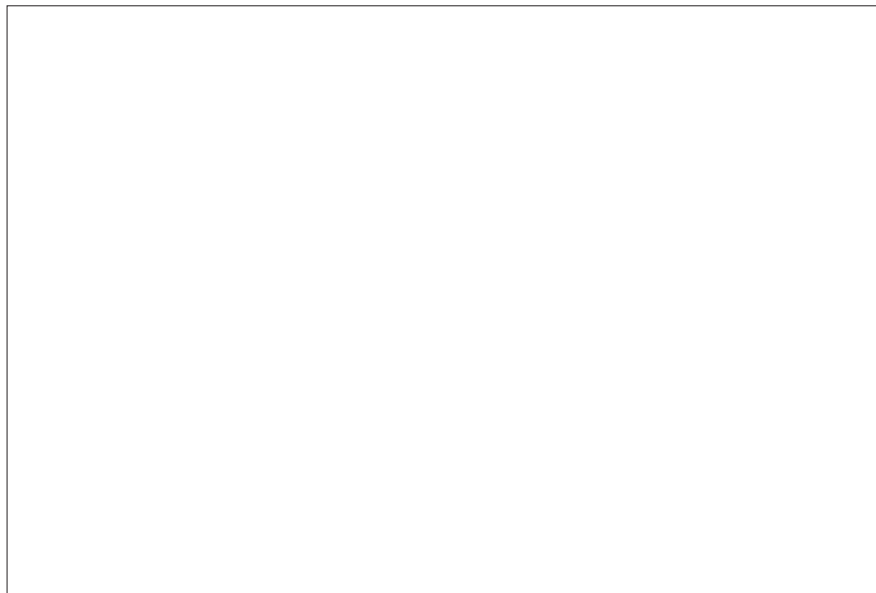
점거 농성을 보호하려고 학생들이 농성장 주변에 차린 피켓라인에 노동자들도 합류했다.

목요일에 [코네티컷주 주도(州都)] 하트퍼드 소재 사립대학 트리니티컬리지에서 학생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제 코네티컷주에는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 농성장이 네 곳이었다.

점거 농성은 이번 주에 미국 국경을 넘어 번졌다. 목요일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학생들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시애틀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시위를 억누르려고 [학생들이 행동에 돌입하기도 전에] 미리 캠퍼스 출입문을 걸어 잠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학생들은 탄압과 저항이 맞붙는 최전선에 서 있다. 1일 수요일 저녁에 경찰은 점거 농성을 깨뜨



미국 대학생들의 대찬 투쟁은 바이든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5월 2일 UCLA

리려 농성장을 침탈했다.

학생 수백 명이 농성장을 지키려 대열을 지었다. 학생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방패로 삼았다.(사진)

학생들은 여러 차례 경찰들을 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가혹한 국가 탄압이 학생들을 밀어냈다. UCLA의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젯밤 법집행기관이 UCLA의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 농성장을 침탈했다.

“경찰은 12시간 넘게 학생들과 학생들에 연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농성장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농성장 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공격해 200명을 체포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로스앤젤레스 시경이 합동 작전을 펴 학생들에게 고무탄을 쏘고 섬광탄을 던지며 학생들을 제압하려 했다.

“경찰은 수백 명을 체포하고, 학생들을 곤봉으로 때린 후 맨땅에 짚질 끌고가 억류했다. 경찰관들은 시위 진압 장비로 중무장하고는 대학 당국에 맞서

농성장을 지키려 인간띠를 만든 비무장 학생들을 공격했다.

“많은 학생들이 머리와 손에 고무 탄환을 맞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갔다.”

UCLA 학생 라이언은 체포에서 풀려난 직후 알자지라에 이렇게 인터뷰했다. “학교 당국은 대(對)이스라엘 투자를 철회할지 고민하느니 차라리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해 다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불법 집회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행동할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컬럼비아대학교 당국은 이번 주 초 경찰을 학내로 들여 점거 농성을 뜯어내게 하고는 이후 캠퍼스를 폐쇄했다. 컬럼비아대학교 해밀턴관(館)을 점거했던 학생들이 경찰의 잔혹 행위를 증언하는 내용이 계속 추가로 보도되고 있다.

학생 한 명은 이렇게 전했다. “경찰은 저희 가슴을, 배를, 머리를, 얼굴을 건

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뇌진탕과 열상을 입었고 발목을 다쳤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을 때 손목을 싸맨 사람들을 봤어요. 찢어진 상처를 꿰매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뉴욕시경(NYPD) 경찰관에게 입은 상처입니다.”

30일 화요일 밤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한 명이 해밀턴관 내에서 총을 쏘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시경 측은 해당 경찰관이 벽에 “실수로 발포”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은 경찰의 공격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행동에 나서고 있다. 목요일 밤에는 수백 명이 컬럼비아대학교 총장 네마트 샤피크의 저택 앞에 모여 최대한 시끄럽게 소리를 냈다.

경찰은 뉴욕시에 있는 뉴욕대학교와 포드햄대학교,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주립대학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대학교, 오리건주 포틀랜드시(市)에 있는 포틀랜드주립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체포했다. 캠퍼스 시위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 포함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전쟁 반대 시위를 억누르려고 미국 국가가 어디까지 나아가려 하는지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학생들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했을 때 다시 드러났다. 목요일에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재산 손괴는 평화 시위가 아니다.

“불법이다.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 깨뜨리기, 캠퍼스 봉쇄,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기 — 어느 하나 평화 시위가 아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을 3만 4000명 넘게 살해하는 데서 공범 구실을 한 대통령이 폭력 운운하는 것을 학생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소피 스카이어

출처 Sophie Squire, ‘US pro-Palestine students push back against cops’ (2024. 5. 3) / 번역 김준호

▶ 2면에서 이어짐

파흐 공격이 초래할 반향이다.

미국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용감한 점거 행동을 벌이고 있다. 유럽 등 세계 각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미국 대학생들의 점거에 고무돼 탄력을 받고 있다.

아랍 정권들은 자국 대중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약

9조 4000억 원가량 규모)을 최근 전면 중단했다.

이스라엘이 예고한 지상군 침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악화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했다. 바이든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협상의 타결을 원하지 않았다. 네타냐후는 “우리의 존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승리뿐”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청소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라파흐에 대피 명령을

내린 직후 바이든은 네타냐후와 통화하면서 라파흐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카렘 아부 살렘(케렘 샬롬) 국경지대를 개방하라고만 요청했다(미국 뉴스 웹사이트 악시오스).

덜 시끄럽게 ‘인도적’으로 학살하라는 말이다.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학살자 조 바이든, 당신은 공범이다” 하고 외치는 것은 완전히 옳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학생 점거 운동과 1968년 반란

5월이 시작된 지금 미국 대학교 80곳 이상에서 학생들이 농성장을 차리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월 18일 이래로 시위 참가자 2300명이 연행되거나 억류됐는데도 학생들의 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곳 영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커지고 있다.

시위의 이런 규모를 보면 1960년대 글로벌 학생 운동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 당시에 운동의 동력은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살인적인 참상이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 지금은 가자 전쟁인 것이다.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대학교는 오늘날처럼 당시에 운동의 진원지였다. 당시는 SNS가 등장하기 한참 전이었지만 1968년 사태에 기초해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함성> (Strawberry Statement)이 만들어져 필자가 급진적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

베트남 전쟁과 그에 대한 반대로 서구 사회에는 심각한 이데올로기 위기가 닥쳤고 그 결과로 한 세대의 청년들이 급진화했다. 주목할 것은 1960년대 후반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런 학생들을 만들고 있는 자가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때는 린든 존슨, 지금은 조 바이든. 주류 중도 좌파의 제국주의적 잔혹함과 그 위선이 다시금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양극화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이 커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 자본주의 — 역자] 체제의 전체적 위기는 1960년대 후반보다 더 극심하다. 당시는 긴 전후 호황이 끝나가고 있던 시기였다.

더 극심한 위기와 양극화

그러나 다른 차이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전반 청년들의 급진화는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상승하는 맥락 속에서 벌어졌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수준 압박이 노동계급의 전투성을 촉발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훨씬 큰 규모로 벌어진 곳은 프랑스 · 이탈리아 · 영국이었다. 젊은 노동자들은 더 광범한 급진화의 일부였고 그중 많은 수가 학생 투사들



1968년 5월 파리의 시위대와 2024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농성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베트남 전쟁 경험은 수많은 대중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깨치는 과정이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 함께, 당시 성장하던 혁명적 좌파 단체에 가입했다.

2021~2022년에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생활 수준을 공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전투성이 커졌다. 그러나 1968년 5~6월 프랑스,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 1970~1974년 보수당 정부에 맞섰던 영국 노동자 반란에 견줄 만큼의 폭발적 노동자 투쟁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극우는 1960년대보다 훨씬 더 전진한 상황이다. 유럽의 극우는 주로 선거적으로 강력한 세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그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기층의 극우 활동가들이 엄청난 활력을 얻고 있다.

미국 대학가에서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장면 하나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시온주의자들이 학생들의 농성장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캠퍼스 경찰과 시위 진압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한 것이다. 또 다른 곳, 예컨대 시카고대학교에서는 폭력배들이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면서 농성장을 위협했다. 1968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도 좌익과 우익 학생들의 충돌이 있었지만, 시온주의자들과 파시스

트들이 연합할 잠재력은 오늘날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거대한 규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운동의 전위 구실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향한 탄압 시도가 보여 주는 바는, 지배계급들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에 공모하면서 직면한 대중적 경멸 때문에 그만큼 수세적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우려돼 온 라파르 공세를 벌이겠다고 이스라엘이 위협하고 있다. 그런 위협에 맞서려면 지금까지 선도해 온 학생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동원돼야 한다.

베트남 전쟁 경험은 수많은 대중이 현실에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깨치는 과정이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에 맞서 세계적으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방 지배계급들이 살인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밀착해 있는 것은 가자지구가 그런 세계적 쟁투의 한 전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보면, 과거에 내 세대가 그랬듯,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 체제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해야 한다.

번역 김종환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강동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채택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안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를 13퍼센트로 올리는 대신(44퍼센트 인상), 소득 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급(25퍼센트 인상)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이 방안조차 재정 안정을 무시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는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 운운하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DC형 연금은 받는 연금액이 확정된 현행 확정급여형(DB)과 달리, 보험료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낸 만큼 받는’ 제도다.

사적 보험

비슷한 취지에서 올 초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신연금’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국민연금과 청년들이 가입하는 신연금을 분리하고,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자는 주장이다.

스웨덴을 비롯해 남미의 여러 국가



‘낸 만큼 받는’ 연금 제도는 국가가 노후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셈이다

가 신자유주의적 조치의 일환으로 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바꿨다. 그러나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 수급액이 개선된 사례가 없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원리상으로 보자면, 국가가 노후 생활 보장을 책임지지 않고, 금융 시장의 변동에 따라 낸 만큼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우파 언론들은 젊은 세대 부담 운운하며 낸 만큼만 받는 연금 제도가 공정한 것인 양 주장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

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젊은 세대이다. 어지간한 연금을 받으려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조차 세계 금융 시장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변동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불가피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 사적 보험처럼 각자 국민연금에 투자해서 노후에 수익을 챙겨 가라고 도입한 게 아니다. 적자 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연금 지급을 보조해야 하는 것이다.

우파들이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낸 만큼 받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연금 지급으로 늘어날 재정 적자와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늘어날 부유층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세대 간 분배 문제가 아니라 계급 간 분배 문제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젊은 시절에 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들은 늙어서 평안한 삶을 보낼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이 사회의 부를 독차지해 온 부유층과 기업주들이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악안 수용하려 하는 민주당, 민주당 추수하는 진보 단체들

일부 우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임기가 5월 말인 21대 국회 중에 연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소속의 여야 간사들은 5월 8일부터 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여야 간사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안의 중간 지점인 ‘보험료를 12.5퍼센트, 소득대체율 45퍼센트’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통해 중간 지

점에서 절충해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더 미뤘다가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연금 개악이 아예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절충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보다 더 심각한 후퇴이다. 보험료는 38.9퍼센트 올리면서, 국민연금 지급액은 12.5퍼센트만 올리는 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내세우며 보험료 대폭 인상을 주장하더니,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는 동떨어진 안에 찬성해 주려고 한다. 전세사기특별법,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에서

국민의힘과 타협하며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는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연금 개악을 주도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정의당 등 주요 개혁주의(진보) 단체들이 모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도 국민연금 ‘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도 보험료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 협상을 중시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을 위해 투쟁에 나설 설을 죽이는 일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부차적인 것으로 방치하면,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연금 개악에 타협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게 된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제안한 목적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기업주 등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정부가 연금을 보조하고, 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

전공의 파업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금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어렵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는 패소가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이미 의사들을 이기기가 꽤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증원 연기라는 모양새가 그나마 상처를 최소화하는 퇴로가 될 수 있다.

사법부가 나선 것이 윤석열에게는 승소하면 명분을 주고, 패소하면 퇴로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것은 개혁 염원 대중의 실망만 낳을 것이다

가 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이 먼저 윤석열 정부에 퇴로를 제공하려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29일 윤석열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줬다. 대통령실은 “딱 막힌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을 얻었다”(《국민일보》, 5월 1일 자)고 자평했다.

이재명은 선거 국면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해 “400~500명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름의 퇴로 제공을 한 셈이다. 400~500명 증원안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더 ‘합리적’이고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 정치인임을 보여 주려는 듯하다. 이재명의 퇴로 제공으로 윤석열이 만에 하나 위기를 탈출한다면 이재명의 지배계급 내 위상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책략은 윤석열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이들을 헛갈리게 하거나 사기를 후퇴시키게 만드는 일이다.

어쨌든 윤석열로서는 난제인 의대 증원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약속받은 것이다. 증원 규모를 줄이게 되더라도 ‘협치’의 결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이비 개혁을 총선용으로 내놨다가 난관에 빠진 윤석열이 이 문제에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탈출구를 찾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의료 ‘개혁’은 간데 없고 전공의 파업이 이어진 두 달 넘도록 전전긍긍하며 견딘 인내도 헛된 일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의료 개혁인가 —
계급간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의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윤과 시장에 맡겨진 의료는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차별화 된다. 의료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계급 간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다. 이익이 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투자가 이뤄지지만, 노동계급이 주로 겪는(예컨대) 산재 예방이나 치료(중증 외상 등)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은 이 문제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반면, 이재용 같은 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슨 필수의료 공백이 있겠는가?

대도시로의 집중이 문제이긴 하지만(지역의료 공백) 대도시에서도 노동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불편하고 비싸다는 계급 문제가 있

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방 중 소도시에서도 기업주·부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어디에서든 노동자 등 서민층 환자들은 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돈벌이가 안 된다고 대중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처지다. 의사들의 수입이 의료 행위의 종류와 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들 중 일부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며 신뢰는 더 허물어진다.

이런 문제들, 곧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무상의료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

개혁이라 할 만하다.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재난에 대한 보상과 거의 30년에 걸친(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호황으로 의료(와 교육) 불평등과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하에서는 이런 개혁의 성과도 점점 허물어진다. 오늘날 장기 불황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회복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이윤과 지정학적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는 재정과 의료 운영을 갈수록 이윤에 내맡기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부분에서도 재정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낙후하고 관료적으로 일그러지기 일쑤다.

따라서 오늘날 공공의료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의료 개혁은 훨씬 급진적인 전망 속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재명의 의료 개혁은
윤석열과 얼마나 다를까?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지만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입장에서 개혁이라 볼 수 없다. 불평등과 불균형, 신뢰성 등 어떤 측면에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부분 수가를 올려 의사들을 해당 분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투입 계획 등 핵심 내용이 극도로 부실해 빈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비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의과학자 양성’ 등을 내세우는 등 대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도 슬쩍 끼워넣었다.

4월 1일 대국민 담

화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등을 내세우며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유사(사이비) 개혁일 뿐이다.

윤석열은 대선 당시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지금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 등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서 더 나아가 윤석열의 의료 ‘개혁’을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지지하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료 개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7면으로 이어짐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하며 힘을 실었다. 자주파 활동가들이 옆에 동반했다. 집회 규모는 승례문 앞 세종대로를 가득 채울 만큼 컸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별 대책위를 세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이후 9월 초까지는 정의당, 진보당 등과 함께 핵폐수 반대 범국민대회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열의는 금세 사라졌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9월 말까지 몇 차례 더 이어진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마침내 힘을 뺐다.

민주당의 초점은 국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과 씨름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올해 2차년도 방류와 4월 총선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내 책략이나 기자회견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응을 조직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을 이유로 대면서 자신의 미온적 대응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핵폐수 반대 여론은 굳이 통계적 근거가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고 광범하다.



지난해 9월 2일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이재명.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힘을 뺐다

운동 지도부에 효과적인 대안과 확신이 없으면 반대 정서는 운동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잠재력을 잃기 쉽다.

민주당은 한사코 핵폐수 문제를 바다와 수산물의 오염 문제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은 방류가 계속 강행되는 상황에서 핵폐수 방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후퇴하기 쉽다.

실제로 8월에는 “총력 단결해 저지하자”던 민주당은 단 두 달 뒤 열린 국회 종합감사 때는 “정부는 검사 장비

를 충분히 구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수준으로 후퇴했다.(2023년 10월 25일 농해수위 종합감사장에서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의 발언)

사실, 더 본질적으로 민주당은 핵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핵무기 잠재력을 갖는 것이 한국 국가와 자본주

의에 이익이 된다는 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본질적 이견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관리 가능한 핵”이라는 공상을 공유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일본 핵폐수 방류 묵인 문제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협력하는 더 큰 문제의 일부다.

민주당은 한일 지배계급들이 미국 주관하에서 맺은 우호적인 관계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래 수십 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에 준 이익과 앞으로의 한미일 동맹이 가져다줄 이익을 의식한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정말로 결별할 생각이 없다.(중국과의 관계라는 또 다른 토끼도 놓쳐선 안 된다는 ‘균형’론을 말하면서 말이다.)

민주당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시스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국의 ‘국위’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핵폐수 반대 운동에서 한결같을 수 없는 세력인 것이다.

그러나 범국민대회를 함께 조직했던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은 공동의 운동에서 후퇴하면서 떠난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운동에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되지도 못했다.

진보 정당이 말하는, 민주당으로부터의 차별화나 선명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바로 이럴 때 발휘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김승주

▶ 6면에서 이어짐

연간 400명 의대 증원으로 규모가 더 작았는데도 당시 전공의 등이 크게 반발해 중도 포기했다.

함께 중도 포기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실효성 없는 개혁이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지역 병원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학부 졸업 뒤 전공의 4~5년, 군의관 3년, 전임의 2~3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의

무 복무 기간은 고작 2~3년에 불과할 수 있다.

시장화된 의료 체계를 내버려 둔 상태에서 누가 공공의대에 자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 지금도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지만 2022년 지원자는 단 한 명이었다.

요컨대, 시장화된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기에는 애초에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시행이 돼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방안이었던 것이다.

증원분의 10퍼센트가량을 의과학자로 양성한다는 내용은 윤석열이 물려받았다.

이재명은 그의 경력 때문에도 의료 개혁에서 좀 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2000년대 초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성남시장이 되서는 실제로 성남시 의료원을 세웠다.

이재명은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에서 그가 윤석열의 의대 증원 방안의 허상을 비판하고 폭로하기보다는 지지와 협조를 표방한 것은 그가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지킬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는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인 신상진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점거 농성 중인 미국 대학생들이 말한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시위에 참가하는 대학의 수가 매일 같이 늘고 있으며, 국가는 이미 학생을 2000명 넘게 체포했다. 뉴욕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 활동가들이 이 운동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소피 스코 이어**에게 전했다.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학생 운동이 포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지배계급은 이 운동을 분쇄하고 싶은 마음과,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요구를 쟁취할 겁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뉴욕대학교(NYU) 학생 벤저민이 지난주 일요일에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한 말이다.

벤저민은, 현재까지 70곳이 훌쩍 넘는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며 성장 중인 활력 있는 반전 운동의 일원이다.

이 운동의 파장은 미국 안팎을 휩쓸고 있으며, 권력층을 떨게 하고 있다. 미국 권력층은 이 시위가 제풀에 스러지길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술하게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운동을 유대인 혐오적이라고 비방해야 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이 운동을 “유대인 혐오 시위”라고 비난했다. 유대인 학생들이 이 운동의 핵심부에 속해 있는데도 미국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유대인에게 위험하다고 묘사한다.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나서서 이 운동에 “끔찍”하고 “무도한” “유대인 혐오”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런 반응은 지금 학생들의 도전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또 어떤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시위가 1주일 넘게 이어진 지금, 뉴욕 대학교 학생들이 행동 수위를 높일 태세가 됐다고 벤저민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들은 뉴욕대학교 농성 첫날 밤 완전 무장한 진압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학생 120명 이상과 교직원들, 그 밖에 소수의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총 140명 정도가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는 교훈을 얻었고,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더 만만찮게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점잖게 행동하려는 시늉조차 일절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학생들의 점거 농성 가자에 연대하는 브라운 대학교 캠프 농성장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농성이든 점거든 소요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구를 쟁취하겠다는 태세가 더 굳건해지고 있어요.”

이어서 벤저민은 경찰이 뉴욕대학교에서 무척 잔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투지를 더 돋웠습니다. 생전 처음 체포되는 일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간담이 서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낳았다고 봅니다.

“학교 당국의 요청으로 경찰이 투입된 지금은 특히나요, 투입된 경찰 병력 중에는 뉴욕경찰청 산하의 악명 높은 시위 진압 부대인 전략대응조(SRG)도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많은 학생들이 공식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정치인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고 한마디 하고는 결국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승인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믿지 않아요.”

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튀르키예·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점거 농성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미국 운동의 자신감을 받아안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단결한 학생 운동이 전 세계 살인마 지도자들의 범죄를 규탄하면 그들을 더한층 떨게 할 것이다.

벤저민은 국가나 대학 당국과의 협상으로는 학생들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운동에 참가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하지만 저는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명청한 관료적 협상에 학생들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학생 운동과 더 광범한 대중 운동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이 학생 운동으로만 남으면 패배를 면치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학교를 가자지구에 연대하는 민중의 대학교로 탈바꿈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럴 수 있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결이 저들을 허둥대게 만들었다”

점거 물결의 진앙지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은 시위 1주일 차를 넘긴 지난주에도 굳건하게 점거를 유지했다.

대학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위의 파급력을 억제하고 싶어 한다. 캠퍼스 내 서쪽 잔디광장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린 학생들의 행동에 밀려 대학 당국은 학생들과 협상해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

고 전했고, 대학은 탄압만 강화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SJP)은 대학 당국이 캠퍼스 전체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학생 수천 명이 기숙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SJP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대학 당국보다 언제나 한발 앞서 있다. 대학 당국이 계속 겁주기 전술을 쓰겠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단결과 집단적 대응은 이미 저들을 허둥대게 만들었다. 컬럼비아대학교 당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 거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농성장을 침탈한 경찰

미국 남부 경찰 폭력의 역사를 계승하다

미국 남부 주들에서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한 가장 폭력적인 국가 탄압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목요일 경찰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모리대학교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고무탄, 최루가스를 퍼부었다. 학생들은 그 다음 날 에모리대학교 광장에서 500명 넘는 규모의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이런 구호를 외쳤다. “팔레스타인에서 멕시코까지 경계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

에모리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SJP)은 지난주를 경과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얼마나 대규모로 커졌는지를 보여 줬다. 에모리대학교 SJP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월에 주최한 매우 작은 시위 사진과 이번 주에 조직한 훨씬 더 큰 시위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텍사스주 주지사 그렉 애벗은 텍사스주립대학교 학생 시위 진압에 주(州)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맞서 싸웠다. 학생들은 경찰이 캠퍼스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팔짱을 끼고 대열을 형성했다. 몇 시간 동안 경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끝에 학생들은 경찰을 캠퍼스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밴더빌트대학교 학생들은 3월 26일부터 대학 건물 커크랜드관을 점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할지 여부를 정하는 총투표를 취소한 것에 항의해 점거에 돌입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학생들과 [같은 주에 있는 사립대학교] 듀크대학교 학생들은 힘을 합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캠퍼스 건물인 사우스빌딩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렸다.

▶ 10면으로 이어짐

아이비뿐 아니라 공립 대학 학생들도 싸운다

명문 사립대학교 학생들만 들고일어난 게 아니다. 공립 대학교인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휴볼트 캠퍼스에서도 점거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빈 정수기 물통으로 경찰에 맞서는 영상이 지난주에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물통은 학생 운동의 상징이 됐다. 휴볼트 캠퍼스의 학생들은 캠퍼스를 ‘해방구’로 바꾸고 모든 출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점거 농성 참가자들은 대학 강의동 ‘지멘스관(館)’의 이름을 ‘인티파다관’으로 바꿨다.

대학 총장 톰 잭슨은 학생들이 “승고한 대의”를 위해 점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학생들을 범죄자라고 칭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총장실에 진입해 사무실 벽에 “당신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휘갈겨 썼다.

지난주 토요일 진압 경찰이 캠퍼스에 불도저를 몰고 왔지만, 점거를 방어하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하자 캠퍼스를 떠났다.

휴볼트 캠퍼스 학생 한 명은 이렇게 전했다. “점거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수업] 과제를 농성장에 들고 왔어요. 이게 가볍게 하룻밤 지내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경찰도 점잖게 대응할 거라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침탈하더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 즉시 경찰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어서 그는 이 운동이 썩어 빠진 미국 제국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했다. “국가가 시위에 이토록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2020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운동의 재림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사상 최악의 반감을 사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찰 재정 삭감, 심지어 경찰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극심한 빈곤과 인플레이 이후 사람들은 미국 제국의 심장부에 산다고 해서 좋을 게 그다지 없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통감하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은 그런 환상에 시큰둥해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뉴욕대학교(NYU) 농성장

미국 대학생 반란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때로 한 장의 사진이 역사의 전환점을 포착하기도 한다.

1970년 5월 4일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오하이오 주방위군에게 살해된 제프리 밀러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 있는 메리 앤 베치오의 사진이 그 한 사례다.

54년 전 그날 주방위군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고 캄보디아로 확산하는 데 항의하는 시위 참가 학생 네 명을 살해했다.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1970년 5월 15일 경찰은 켄트주립대학교 학생 두 명을 살해했다. 켄트주립대학교는 [미국의 인종 분리 체제에 의해]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교였다.

미국 정부가 미국 땅에서까지 광기 어린 살인을 연거푸 자행한 데 대한 분노가 미국을 휩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수백만 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와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는 미국 지배계급과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게 재앙이었다. 닉슨은 반전 운동의 압력에 얼마 버티지 못했다.

결국 닉슨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확대하려던 미국 지배계급의 계획을 접어야 했다.

지금 경찰에 맞서 싸우며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하는 학생들의 투혼은 1960~1970년대 반전 운동과 같다.

이들의 저항도 지배계급을 무릎 꿇리는 데에 한몫할 수 있다.

대중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대학 교문을 넘어 거리와 일터로까지 확대되면 미국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을 계속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이곳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Socialist Worker, 'US student revolt: make this a turning point' (2024. 4. 30) / 번역 김준호

▶ 9면에서 이어짐

대학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연대하다

학생들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연대해 행동을 벌이고 있다.

텍사스주립대학교의 한 강사 단체는 경찰이 대학교를 점령하고 있는 한 “수업 없음, 채점 없음, 과제 없음, 작업 없음”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캠퍼스를 떠나기 전까지 “업무가 평소처럼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금요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소속 노동자들이 뉴욕시 거리를 행진하며 뉴욕대학교 학생들의 농성에 연대를 표했다.

뉴욕대학교 갤러틴개별연구대학 노동자들은 뉴욕대학교 총장 린다 밀스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장 불신임안은 밀스가 농성 중인 학생들을 상대하러 경찰을 동원한 것 때문에 발의됐다.

캠퍼스를 침탈한 경찰 대열이 학생 대열을 치지 못하게 두 대열 사이에 서는 노동자들도 있다.

노스웨스턴대학교 메릴저널리즘스쿨의 조 교수 스티븐 스래서는 이렇게 전했다. “학생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농성장 방어를 지원하고 농성에 연대하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스래서는 노동자와 학생 개개인이 체포될 각오를 했는지 구분하기 위해 색깔 표시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래서는 빨간색이 체포를 각오했다는 표시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빨간색이에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경찰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우리 학생들을 건드리기 전에 제 몸을 던져 막고 싶었어요.”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교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지지합니다"

1968년 반란의 교훈

많은 미국 학생들이 자신의 투쟁을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벌어진 위대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유사하다고 여긴다.

1968년 컬럼비아대학교 시위에 참가한 베스 매시는 지난주 컬럼비아대학교 시위에 참가해 이렇게 연설했다. “켄트주립대학교와 켄트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투쟁을 멈춰야 한다거나 위축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투쟁을 더욱더 크게 건설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탄압은 미국 국가가 1960년대에 그랬듯 전쟁 반대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1970년 5월 학생 약 400만 명이 동맹 휴업을 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런 종류의 행동에, 특히 노동자들의 행동이 결합되면, 민주당의 이스라엘 지지에 균열을 낼 잠재력이 있다.

출처 Sophie Squire, 'Students speak out from US protest camps' (2024. 4. 29) / 번역 김재현·김준호

극우의 국제적 전진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 극우가 세계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강경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살인적이었던 1976~1983년의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자다. 한편,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헌법을 바꿔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한다. 네덜란드의 헤르트 빌더르스는 총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유당(PVV)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득표율이 24퍼센트에 육박하며 1위를 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형 파시스트 정당들은 — 각각 독일을 위한대안(AfD)과 국민연합(RN) —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적을 바탕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비교적 큰 성적을 기대하며 더 전진하려 하고 있다.

2 주류 우파 정당들 내에서는 영국 보수당의 수엘라 브래버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처럼 극우적 언사를 내뱉는 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의 중도 우파는 의회 표결에서 갈수록 극우에 의존하려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내 강력한 지지 기반 덕분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질렀다.

3 극우의 전진은 중도 좌·우파로 이뤄진 주요 신자유주의 정당들이 실패한 직접적 결과다. 이 정당들은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자 긴축을 강요해 평범한 노동자들이 위기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예컨대 현재 그리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2만 2314달러로, 가장 높았던 2008년의 3만 1902달러에서 여전히 한참 떨어져 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물가 급등 탓에 임금은 더욱 타격을 입었다. 그 덕분에 극우가 "엘리트"나 "카스트"를 비난하는 선동을 펴기가 더 수월해졌다. 또한 극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에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에서도 득을 봤다.(전쟁 반대 정당이 극우뿐이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다중적 위기가 세계적으로 극우의 발흥을 낳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이들에 맞서 대중적 반대 행동을 구축해야 한다

4 극우는 세계 금융 위기가 분출한 후 노동 대중의 삶이 악화된 것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불만을 이주민·난민으로 돌리려 한다. 이주민·난민이야말로 이 체제가 봉착한 다차원적 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예컨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大)중동(중동·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캅카스까지 아우르는 지역 — 역주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벌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피란민이 된 사람이 적어도 3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면 거부당하고 괴롭힘에 시달린다. 그리스 인근 지중해에서는 그리스 해군이 난민선의 입경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배가 전복돼 난민 600명이 익사하기도 했다.

5 주요 집권당들이 극우를 달래려고 이민 제한을 강화하고 시민적 자유를 공격하며 억압을 강화한 것에 힘입어 극우 정당들은 크게 강화돼 왔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리시 수낙의 영국 보수당 정부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선을 저지"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민자를 탄압

하는 법을 새로 표결해 유럽연합의 "요새화한 유럽" 정책을 더 강화했다. 무슬림 혐오는 서방 제국주의가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극우에 의해 '아래로부터' 강화되고 있다. 극우가 퍼뜨리는 악랄한 반(反)무슬림 인종차별을 집권당들이 핵심 권력층 안으로 들여왔다. 극우는 무슬림 혐오에 따라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유대인 혐오도 이용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사람들, 특히 인종 학살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반(反)시온주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유대인 혐오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인종차별 관념들을 강화하고 있다.

6 극우와 더 광범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단호하고 되도록 큰 규모로 반격해야 한다. 극우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역이 선거인 만큼 선거에서도 극우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도좌파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온 동시에, 극우를 추수해 왔고, 신자유주의의 대항자를 자처하는 극우가 데마고기로 반(反)이민자 인종차별을 이용하는 것을 추수해 왔다. 다가오는 선거, 예컨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혁명가들은 긴축·인종차별·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후보·선거명부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7 그러나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거리와 일터에서의 투쟁이다. 혁명가들은 조직화한 파시스트들에 맞서 대중적 반대 행동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노동조합 활동가들, 좌파 정치 단체들, 지역 단체들을 단결시켜 파시스트들의 공격과 행진을 저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민자·난민과의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 모두를 단결시킬 최대한 폭넓은 대중운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8 인종차별과 파시즘은 자본주의 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고, 그 체제의 위기가 극우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하나의 정치 경향으로서 국제 사회주의경향(IST)은 자본주의와 그것이 낳는 해악이 모두 사라진 세계를 쟁취하는 데 필요한 국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력하고,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학생들의 고무적인 항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우리가 건설해야 할 반(反)제국주의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가는 길을 보여 준다.

출처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IST statement against the far right' (2024. 5. 2) / 번역 김중환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 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라며 개악을 정당화한다. 이를 통해 연간 건보 재정 약 121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정부의 개악을 뒷받침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7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1년간 간암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약 5000만 원을 부담한 사례, 한국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50대 베트남인이 1년간 간 질환 등 질병 치료를 받아 건보공단이 약 9000만 원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사람들이 본국에서 해당 병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받거나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정말이지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냉혈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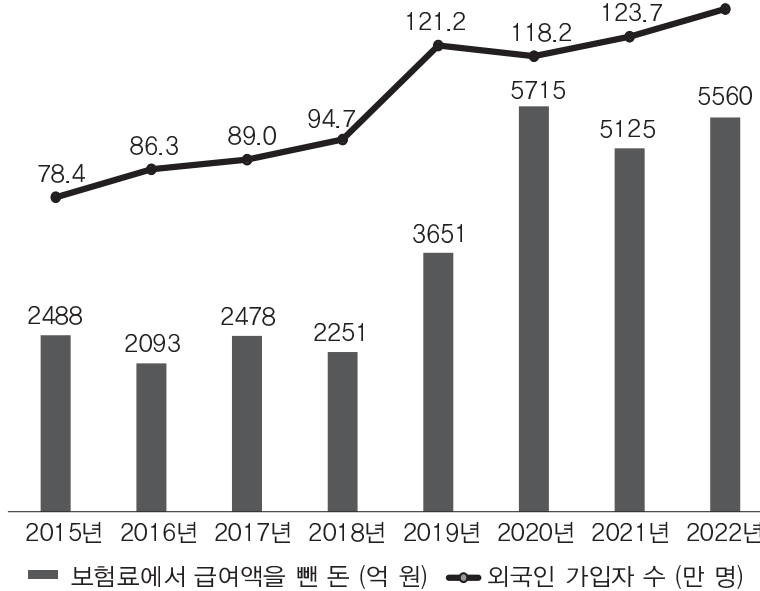
기업 지원이나 군비 증강에 돈을 펍 쓰는 것보다, 그 대상이 이주민이든 누구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이주민이 성년이 될 때까지 드는 육아·가사·교육·사회서비스 등 일체의 비용은 모두 본국에서 지출됐다. 이주민 도입 자체가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에게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아낀 것이다. 본국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은 이주민의 부모 등 가족이다. 그들이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돌봄 노동자로 한국에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에 오면 6개월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실 정부야말로 가장 큰 체납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2016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정부는 법정 건보 지원금도 체납하고 있는 반면, 이주민은 건보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미지급금이 14조 원을 넘는다.

반면, 외국인은 2015~2022년 건보 재정에 연평균 3670억 원이 넘는 흑자를 안겨 줬다. 2020년부터는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이 문제?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려 할 때마다 이런 사실이 회자되자, 지난해부터 보수 언론들은 중국인의 경우 적자라는 점을 부각해 왔다.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이용해 전체 이주민에 대한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다수는 조선족(중국 동포)일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자 중 조선족은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보다 2배 많다.

이들을 대거 유입시킨 건 한국 정부다. 한국 정부는 2010년대를 지나면서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과 달리 조선족에 대한 이주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노동력으로 써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족은 가족 단위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외국인에 비해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다. 다른 국적의 이주민들이 젊을 때 일하고 귀

국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인도 갈수록 고령화돼 의료 지출이 늘고 있고,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점차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회피하고 장차 보험료 인상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피부양자 자격이 까다로워지면 전체 보험료 중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몫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단지 중국 국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개악 반대하지 않은 좌파 정당들

정부는 고령화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정착·정주 유도”를 1~3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으로 제시했다.

한국에 정착·정주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본국보다 유리한 제도가 있다면 본국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라면 생계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럴 것이다.

또한 장기 체류나 정주하는 이주민이 느는 것은 이주민과 그들이 부양하는 본국의 가족 모두 고령화된다는 뜻

이다. 그만큼 의료 지출도 늘 것이다.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보장성 축소는 이처럼 이주민 유입을 늘리는데 따르는 비용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처들을 더 확대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민의 정치적 자유도 더 억압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난민이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을 억압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최근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 구금된 이주민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장기 체류나 정주하며 한국을 평생 살 곳으로 여기게 된 이주민이 늘면 처우 개선을 위해 자체 조직화와 정치적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주민도 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들과 노동조합들은 이주 노동자 확대에 반대하거나 흔쾌히 환영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보다 한국인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이주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요구할지라도, 정부가 이주민의 장기 체류와 정주 확대에 대비해 내놓는 조처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축소 개악안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개탄스럽게도 이를 반대한 좌파 정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은 기권했다.(심상정 의원은 불출석)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은 이를 비판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서 출석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했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민의 권리를 일관되게 방어하려면 이주민 유입을 무조건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임준형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이 핵심부서에서 200명을 해고하고 “미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와 브라질 등”에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23년 1월에도 전 세계 인력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줄인 바 있다.

4월 15일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둔화를 이유로 인해 직원의 10퍼센트인 1만 4000명을 해고했다. 4월 4일 애플은 애플카를 준비하던 프로젝트팀을 해체하면서 614명을 해고했다.

4월 3일 아마존은 판매, 마케팅 및 글로벌 서비스 부문 노동자 수백 명을 해고했고, 3월 말에는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 그냥 걸어나가면 무인결제가 되는 방식) 기술에 기반한 상점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인원을 모두 해고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초 2만 70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3월 25일 델(Dell)은 6000명을 해고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대량 해고이다.

빅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는 왜 벌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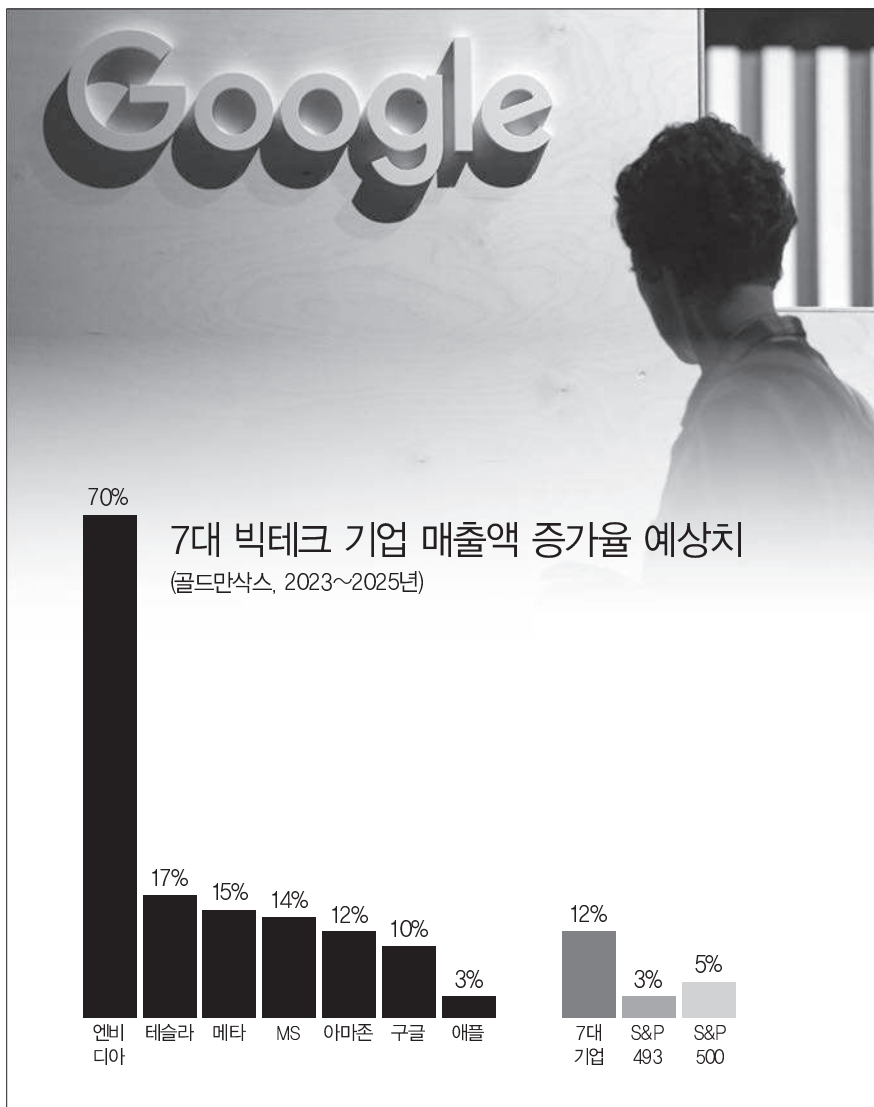
레이오프 창업자 로저 리는 “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당시 과도하게 채용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반쯤 맞는 말이다.

팬데믹 때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 상의 쇼핑과 사교 활동이 급증하자, 테크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렸다. 2019년 말부터 2023년까지 아마존, MS, 구글, 메타, 애플은 총 90만 명을 채용해 이들의 총 고용 인원은 216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71퍼센트나 늘어난 수치였다.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2021년까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 스타트업 기업들도 자금을 손쉽게 끌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분위기가 바뀌



12 대 3 7대 빅테크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그들을 제외한 S&P 493 기업의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경기후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었다. 금리가 오르자 신생 벤처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사업을 줄였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이런 사태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이때부터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가 확산됐다.

대표적 사례는 메타(페이스북의 새 이름)다. 팬데믹 동안 메타는 직원 수를 거의 두 배인 8만 명으로 늘렸지만 2022년 11월에 1만 1000명을 해고했고, ‘효율성의 해’로 정한 2023년에 다시 직원 2만 명을 해고했다. 세탁, 마사지, 음식 및 피트니스를 무료로 제공했던 직원 복지는 과거지사가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빅테크 기업이 “순이익을 개선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면 TCI 펀드운용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게 인원 감축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노동력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듣고 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은 단지 현재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서만

은 아니다. 옆의 그림은 S&P 500대 기업 중 7개 빅테크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머지 493개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23년에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애플, 테슬라, 메타)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기업들(엔비디아, 구글, MS) 모두 인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수익성과는 큰 관계 없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구글의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우선순위(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위한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감원)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금 테크 기업들은 모두 인공지능(AI) 개발과 그를 활용한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AI에 대한 투자는 벌써부터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AI를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든, 오픈AI의 챗GPT가 붐을 일으킨 생성형 AI든 광고 효과 외에 그 자체의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I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자체의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어 AI 열풍이 “닷컴 버블을 닮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은 경기 후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장 최근의 지표로는 4월의 비농업 고용이 17만 5000건 증가해 시장 예상치 24만 3000건이나 전월인 3월의 30만 3000건보다 크게 못미친다. 실업률도 3.9퍼센트로 2022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퍼센트를 넘긴 지도 이미 1년이 넘었다. 높은 금리는 수익성이 낮거나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경기후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경영 악화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선제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오키스 참여 논의

미국의 위험한 대對중국 동맹에 가서하지 말라

5월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2+2)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오키스(AUKUS) 참여를 논의했다.

이미 지난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오키스의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4월 10일 자)

오키스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서방 제국주의의 동맹체다. 이는 중국에 대적하려고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공들인 중요한 동맹 정책 중 하나다.

따라서 한국이 오키스에 참여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강대국 간 쟁투와 지역 불안정이 증대하는 데 더 일조할 것이다.

오키스의 협력 분야는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중 필러1[제1기동]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제공 및 배치에 관한 것이다. 필러2는 인공지능(AI), 극초음속, 사이버 안보, 양자 기술 등 8개 군사 기술 협력 분야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러2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오키스 필러2 참여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일본의 참여를 논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일본·한국 등을 오키스에 끌어들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산



한국의 오키스 참여는 강대국 간 충돌 위험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난 1일 한국·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의

업·기술 역량이 첨단 무기 개발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호주 맥쿼리대 연구원인 하나다 료스케는 일본을 오키스 필러2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첨단 무기 개발 협력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은 군사용 또는 이중 용도 장비의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 특히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해양 안보 분야 등에서 [오키스] 3국의 방위 산업 기반과 혁신 생태계를 강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일본 영자지 <재팬 타임스> 4월 9일 자)

한국의 참여도 마찬가지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 리뷰>는 한국의 오키스 참여 논의의 배경을 다루며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반도체 대량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군함과 전투기 및 여타 무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은 [무기] 개발 역량과 직결될 것이다.”(5월 2일 자 기사)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오키스 필러2

참여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키스에 참여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연구와 공급망 재편에서 나름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듯하다.

바이든은 중국을 억지하는 데 부심하며, 중거리 미사일 등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려 하면서 지역 동맹 구조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과 호주의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일본·호주의 지상전 연합 훈련에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참관하는 것도 결정됐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미국과 손잡은 필리핀을 거칠게 압박하고, 미국과 호주가 장악해 온 남태평양 도서 지역에 적극 진출하는 등 말이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한국이 오키스 참여 등으로 미국의 전략에 한층 더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부메랑이 될 선택이다.

한편,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기간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에 과도하게 기울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오키스 참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모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영익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우리의 기본 입장 ①

노동자들이 부를 생산하고, 부자들은 이를 훔쳐간다

미국 '소울 음악의 대부' 레이 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미 가진 것들이 가져가는 거지." 정말 그렇다.

그래서 세계 최대 기업 148곳은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그마치 2600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도 대비 52퍼센트가 는 것이다. 그 순이익 중 82퍼센트는 큰손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레이 찰스가 꼬집었듯, "뒤편도 얻으려면 그 전에 가진 게 있어야지. 애초의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아직 내게 수수께끼라네."

열심히 일하고 직업이 좋으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탈한 부를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다.

또 다른 신화는 당신도 "부를 창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 오디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은 그런 식의 신화를 부추긴다.

하지만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본주의에서 부는 이런저런 사물, 즉 상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품은 오로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다.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말이다.

지배계급은 공장·사무실 등 "생산수단"(혁명가 카를 마르크스의 표현)을 통제한다. 많은 경우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국민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임금을 받는 대가로 남을 위해 일해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일터에서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미국 사회주의자 유진 텡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사용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는 쿠팡 경영진(위)과 쿠팡 배송 센터 노동자들(아래)

지 않는 도구를 소유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한다. 노동계급이 사용하는 도구를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이 생산한 것을 차지한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가난하고 무시받고 홀로 서지 못하는 반면 한 줌의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야말로 핵심적인 "부를 창출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노예들이 알고 있었듯, "부를 창출하는 자"라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장들이 차지한다.

바로 이 상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자본가들의 부도 재생산한다.

노동자들의 몫으로는 그들이 일터로 다시 출근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만 주어진단다.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마르크스는 이를 "잉여가치"라고 불렀다)는 자본가들이 가져간다.

착취

이것이 바로 착취다. 노동자들은 막대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만, 이 가치는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진다.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더 부유하고 강력해진다. 관리자와 경찰처럼 이런 강도질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 계층들이 존재한다.

공장주, 다국적기업의 수장, 대지주가 단지 "나쁜 사람"이라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주는 수시로 바뀐다. 사장과 관리자도 잘리고 교체되기 일췌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부를 생산해야 한다는 체제의 압력이다. 마르크스가 묘사했듯,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씀이니라."

각각의 자본가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지만 다른 모든 자본가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맞서는 힘을 합칠 수 있어도 그들끼리는 언제나 서로 경쟁한다.

이 체제 전반을 보면 체제를 굴리는 동력은 두 가지다 — 축적의 필요, 자본가들끼리의 경쟁. 이 때문에 불안정이 발생한다. 변치 않는 것 하나는, 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들은 언제나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방적기나 컴퓨터 같은 신기술이 생산을 가속화하고 개별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들에 견줘 일시적 우위에서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쥐어뜯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묶어 둔 채 그들이 더 힘든 조건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노동계급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체제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 때문에 계급투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호부터 '우리의 기본 입장'을 연재한다. 다음 호에서는 노동계급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급인 이유를 다룬다.

▶ 16면에서 이어짐

육군 출신 이종섭을 별 연관성도 없는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을까? 왜 이시원이 직접 나섰을까?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수사 외압, 수사 외압 관여자 엄호, 이 세 국면 모두에서 핵심 행위자이자 의혹의 최종 수렴점은 바로 윤석열이다. 특검이 정당한 이유다.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 개혁을 위한 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총

선 참패 후 위기가 더 깊어진 윤석열의 구명조기도 벗겨질 수 있다.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면, 각종 의혹들의 내부자 입단속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대화하는 시늉을 해야 했다. 이에 응해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연금 개악에서 협조할 수 있음을 내비쳤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용을 후퇴시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비록 채 상병 특검도 통과시켰지만 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위기를 지배계급에게 인정받고 개혁 생색도 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런 화전 양면 작전이라는 책략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일 뿐이다. 특검법만 통과시키면 끝일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말이다. 그러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그저 대중을 박수부대로만 놔둘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 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그가 당선됐다면 채 상병 특검에 훨씬 상징적 무게가 실렸을 텐데도 말이다.(진보당은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단결이 우선이라며 결국 순응했다.)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민주당과 개혁입법 공조를 중시하며 대중 행동 활성화하기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

김문성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격렬히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다.

윤석열은 군 사망 사건에는 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외압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군에 대한 광범한 불신 때문에 해당 사건들의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검찰이 수사·기소를 맡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일어난 범죄를 파악해 그 혐의와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에 넘길 의무는 여전히 군에 있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도 특검법이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대중의 불신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불안한 마음으로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

수사 외압을 통한 대통령의 사법절차 방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권력형 부패 범죄이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애꿎은 사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급 문제다. 또



채 상병 사망 책임과 진상 규명 회피·은폐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한 강제로 군에 온 평범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어떤 권력자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계급 문제다.

사건 당시 국내에서는 곳곳에서 수해 참사가 나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 순방 공식 일정을 마친 윤석열은 즉시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해 전쟁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 대처보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을 우선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핑개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이에 수해 피해는 더 커졌고, 여론은 더 악화됐다. 충북 오송에 이어 경북 예천까지 수해 참사가 연달아 터지자, 정권 핵심부는 대통령 책임론을 희석시키려고 수해 복구 지원에 군 사병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목적을 잘 알기에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은 충성심을 과시할 겸 언론에 '그림이 잘 나오도록'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사병들에게 위험천만한 입수 작업을 명령한 것이다.

홍수로 지반이 약화됐고 급류도 여전히 흐르는 내성천에 사병들은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 급류에 고무장

화를 신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부 건의도 묵살됐다. 그나마 안전 조치로 서로 손잡고 횡대를 지었지만, 사단 지휘부는 손을 떼고 간격을 더 벌리라고 지시했다.

이시원

참사 이후 수사 국면에선 대통령실 지시하에 국방부, 해병대 등이 진실과 책임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이 과실치사 책임자라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유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됐으며, (규정대로 경찰에 넘기기 전) 언론 브리핑도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이 예정된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윤석열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휘관에게 책임 묻는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 직후 뒷선에서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박정훈 대령 순으로 임

성근을 범죄 혐의자에서 빼고 경찰에 넘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은 이 지시들이 "VIP(대통령)의 뜻"이라는 답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에게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다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서 초법적으로 수사 결과를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기소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금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은이 수사 결과를 돌려보내라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한 직후였다. 유재은은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유재은에게 전화한 이시원은 2012년 시작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그는 증거 조작 지시 당사자였다. 하지만 검찰의 감싸기로 미미한 징계만 받았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취임 후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연장과 통치 안정에 이용해 먹으려고 애먼 탈북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에 앞장섰던 자를 정권의 "공직 기강"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과정을 들여다보면,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윤석열의 이시원 임명에 담긴 참 뜻을 알아채고 그에 맞게 행동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의 기강은 전혀 없고,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무도한 지시에도 상명하복하는 '기강'은 발휘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 회피와 은폐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왜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후